

“전두환 건강 상태 감안, 항소심 재판 신속 진행해야”

전씨측 재판 지연 우려에 5월단체 “조속한 역사적 단죄” 한목소리 재판부 현장검증·특정증인 채택 안해...“일주일 두번 공판 열수도” 김정호 변호사 “회고록 집필 관여 민정기 전 비서관 증인 채택 유감”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빠른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전씨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면 ‘역사적 단죄’를 위한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5월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9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열고 전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한편, 전씨측 요청을 받아들여 5·18 당시 506 부대 헬기 조종사 4명과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구에서 광주로 파견 온 506부대의 작전내용 중 사격지시 내용 표현이 있고 5월 21일 헬기 사격과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전씨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측이 요청한 현장검증과 특정 증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 등을 내세워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현장 검증을 통해 40여년 전 헬기 사격 소리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변호인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0여년 전 상태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재연은 불가능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지난 1980년 당시 31사단장이던 정웅씨와 특전사령관인 정호용씨에 대한 증인 채택 요청도 허가하지 않았다. 정웅 사단장은 99세로 법정에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고 정 특전사령

관의 경우 재판부에 제출된 참고 자료에 대한 증인 요청이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부대 중간단계 명령권자들, 일부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증인 요청도 1심에서 증언한 증인들과 비슷한 취지라는 점을 들어 허가하지 않았다.

이같은 점을 들어 5월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재판을 장기간 끌고 가려는 행태 아니냐는 분위기도 흘러나온다. 검찰측에서도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재판지연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증인·증거신청이 많아 지면 하다 못해 일주일에 두번의 공판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월단체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최대 수혜자 전두환을 적법하게 재판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영대 신부와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는 재판 이후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유감”이라며 “전씨의 입장을 반복해서 말해 재판을 연장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충분히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법원 앞에서는 오월 어머니회 회원들이 전씨 이동 동선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차량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반발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두환씨의 네번째 항소심 공판이 열린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오월 어머니회 회원들이 전씨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불법하도급에 당초 공사비 6분의 1로 깎였다

정부 조사결과 ‘학동 참사’는 인제 현대산업개발 부실 해체공사 목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불감증과 부실 시공·불법 재하도급의 고질적인 건설업계 병폐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인재였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물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뒤쪽에 쌓아둔 흙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같이 붕괴했다는 게 정부 조사 결과다.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와 같은 부실 해체공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목인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도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흥기 들고 검찰청사 침입... 검찰공무원 부상

40대 남성이 흥기를 들고 검찰청사에 침입, 검찰 공무원에게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직원 등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하면서 보안 검색대를 갖춰놓지 않은 중앙 현관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48)씨가 이날 오후 9시 50분께 광주시 동구 광주고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 B씨에게 길이 1m가량 일본도를 휘두르다 붙잡혔다. B씨는 옆구리 등을 찔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승용차를 몰고 검찰청사를 찾아 중앙 현관에서 흥기를 빼 들고 “판사실이 어디냐”며 위협했고 방호원이 동료에게 알려려고 자리를 피한 사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

에 따른 저가공사 등도 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애초 공사비의 16%까지 삭감되면서 단위면적(3.3㎡)당 공사비가 28만원에서 -10만원(하도급) -4만원(재하도급)으로 깎였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저조 ▲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욱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3주 뒤 국도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열고 광주고검 차장검사 부속실 앞까지 난입했다.

광주고검·지검은 방문객의 경우 청사 왼쪽 민원실 출입구를 통해 보안검색대와 금속탐지기 검사 등을 거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 현관에는 직원들이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흥기 반입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 재판 증인 1심 출석 계엄군 지휘관 위증 기소 헬기조종사들 항소심선 ‘진실의 입’ 열까

전두환(90)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5·18 당시 계엄군 지휘관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증인이 위증혐의로 기소되자 추후 전씨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4명의 헬기조종사들이 진실의 입을 열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전 준장을 위증 혐의(광주일보 2019년 12월 19일 6면)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라는 전씨측 변호인 질문에 “다녀간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답변과 달리, 1980년 5월 당시 작성된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중정작전(도청 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의 5명은 17:45에 귀대하였음”이라고 적혀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 송씨가 법정에서 광주에 온 사실과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등 위증했다며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투자 가치 100% 확신! 강력추천!

서구 쌍촌동 (한국병원 부근)

- 대 지 : 2,700 m²
- 건물 : 3,704 m²
-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2층 주차장 기계실

매도가격 협의

감정가 5,920,417,660원

상담 010-3733-3933